

박근혜의 “노동 개혁”은 청년이 아니라 재벌들을 위한 것

양질의 국가부문 일자리 대폭 확충하라

9월1일 박근혜는 노동계가 “청년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한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밀어붙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을 위한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임금 피크제(일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제도)를 도입해 고령 노동자 임금을 깎고,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 노골적인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이다. 박근혜 정부가 7월 28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이런 공격의 빌미로 사용되고 있다.

박근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사기다

첫째, 정부가 만들겠다는 일자리 대부분이 저질 일자리이고 대부분 직접 고용이 아닌 인턴이나 직무교육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신규 일자리 창출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된다(20만 개 중 7만 5천 개). 나머지는 인턴,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 등 장차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주는 것일 뿐이다. 이는 기업이 헐값에 청년·학생을 맘껏 착취할 수 있게 해 주는 정책들이다. 또 정부는 공공서비스 규제 대폭 완화와 의료 민영화 조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긴커녕 더 많은 대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일 뿐이다.

둘째, 청년들의 고통을 명분으로 임금피크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 일자리 중 절반 이상(3만 8천 개)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 인건비를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늘려 온 기업주들이 과연 임금피크제로 줄인 지출을 온전히 청년 고용에 쓸까? 정부는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은 삭감하고 저질 일자리는 늘려, 같은 값에 두 명을 부려먹고도 남는 일석이조 기회를 기업주에게 주려 한다.

셋째, 정부는 청년 실업이 인력 수급의 “미스 매치”

(부조화) 때문이라며 대학을 기업 입맛에 맞게 구조조정하려 한다. “기업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기준으로 평가를 강화해 하위권 대학을 퇴출시키고, 산업 수요와 직결되지 않는 학과를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돈벌이’가 별로 안 되는 학문은 쓸모 없는 학문으로 취급돼 고사시키고, 다양한 학문을 배울 기회를 박탈할 것이다. 8월3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도 이러한 공격의 일환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청년과 노동자가 단결해야

기업주들은 이윤을 위해 기존 노동자, 청년 가릴 것 없이 외주화, 비정규직 등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아 왔다. 이들이 고통 받는 동안 기업주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쌓아 올렸다. 수백조 원에 이르는 기업 사내유보금이 이를 보여 준다. 정부는 이처럼 대기업들이 저질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줬다. 따라서 정부에게 양질의 국가부문 일자리(교사, 공무원, 공기업 노동자 등)를 늘리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국가는 청년들을 고용할 능력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주화 등으로 불안정해진 일자리를 원청이 책임지도록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며 싸우는 것은 더 광범한 청년과 노동계급을 단결시킬 수 있는 초점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재원은 기업들에게 감면해 준 법인세를 늘리고, 부유층에 과세함으로써 마련할 수 있다. 한국은 공공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나라다. 한국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출은 OECD 평균의 3분의1밖에 안 된다. 정부가 사회안정망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국가부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요구는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의 정규직과 청년들을 이간질을 반대하며, 오히려 정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라는 투쟁이 필요하다.

2015년 9월3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